

나이트클럽 “과태료 몇백만원 쯤이야”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 코웃음… 포스터 수천장 거리 도배

“서구 일대가 운동 불법 포스터로 도배가 됐습니다. 일일이 제거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깨끗하게 빼어지지도 않네요.”

13일 오후 2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화정역 인근 주택가, 50~60대 희망근로자 10여명이 전봇대와 주택가 벽면에 붙어있는 나이트클럽 포스터를 제거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특히 이날 포스터 제거작업에 투입된 희망근로자들은 포스터 하나에 3~4명씩 달라붙어 작업했지만 더디 기만 했다. 포스터 대부분이 강력 접착제로 붙여져 말끔하게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운태 광주시장 취임과 동시에 광주시와 5개 구청이 일제히 ‘불법 광고

물과의 전쟁’을 선포해 중점업무로 추진하고 있지만 광주의 한 나이트클럽이 서구 일대를 중심으로 보란듯이 도심경관을 해치는 포스터를 부착해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서구에 따르면 전날 새벽부터 지역내 대로변, 주택가, 버스 승강장, 전봇대에 광산구 H나이트클럽 신장 개업을 알리는 가로 0.8m·세로 1m 크기의 포스터 1000여장을 일제히 부착했다.

서구는 나이트클럽 측이 포스터 부착과 관련해 사전 신고가 없었으며, 정해진 계시판이나 벽보판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대체적인 포스터 제거에 나섰다.

서구는 포스터 제거 작업에 이날

오전부터 희망근로자 20명, 구청 직원 6명, 1t 트럭 1대 등을 총동원했다. 하지만 문제의 포스터들은 스프레이식 강력 접착제로 부착돼 쉽게 제거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불법 포스터 부착이 적발되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제한돼 있는 규정을 나이트클럽측이 간파하고 광주시의 불법 광고물 척결 의지를 우습게 여기는 사례라며 대체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육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구에 불법 포스터(벽보)를 부착할 경우 장수에 따라 8000원부터 5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과태료 상한선은 5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데다, 실제 적발

되더라도 대부분 1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가 많아 불법 부착물 근절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나이트클럽 등 상당수 업주들이 ‘과태료를 내더라도 포스터를 부착해 손님을 끌어 모으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불법 부착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포스터 제거에 인력과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법을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서구를 비롯한 광주지역 5개 구청에 불법 포스터를 부착한 H나이트클럽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가장 높은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13일 오후 희망근로자들이 광주시 서구 화정동 한 골목길 전봇대에 부착된 한 나이트클럽의 불법 부착물을 제거하고 있다.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50억대 ‘인터넷 카드깡’ 적발

광주경찰, 2명 구속·3명 입건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결제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물품거래 없이 허위로 카드 사용을 승인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빌려준 인터넷 ‘카드깡’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3일 알선책 이모(39)씨 등 2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모집책 김모(38)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대형 인터넷 쇼핑몰

과 짜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으로 신용카드 결제한 것처럼 꿀꾸며 선이자 30%를 떼고 현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55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뒤 16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카드깡 업자들은 인터넷 쇼핑몰이 대량으로 물건 구매가 가능하고 한 번에 많은 돈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모집책·알선책·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인터넷 계시판에 자문자답식 대출 광고를 내서 급전을 원하는 사람을 끌어 모으면, 알선책은 쇼

핑볼을 통해 이들의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조직적 방식을 동원했다.

이들은 특히 인터넷 쇼핑몰에서 커피·라면 등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해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했으며 구입 물품은 도매가의 90~

95%를 받고 서울 영등포 시장 등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카드깡을 통한 결

제대금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

고 그에 따른 신용카드사들의 부실규

모가 확대 돼 왔다”며 “이들이 대규

모 카드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제

대행업체와 결탁돼 있었기 때문”이

라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13일 오전 9시께 광주시 남구 백운동 모 원룸에 사는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김모(26) 순경이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동료는 경찰에서 “김 순경이 출근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무실에 나오지 않아 집에 가봤더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 순경의 시신에서는 특별한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순경이 최근 여자분제로

고민을 많이 해왔다는 지인 등의 진술에 따라 자신의 신변을 비관, 스스

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13일 오전 9시께 광주시 남구 백운동 모 원룸에 사는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김모(26) 순경이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동료는 경찰에서 “김 순경이 출근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무실에 나오지 않아 집에 가봤더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 순경의 시신에서는 특별한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순경이 최근 여자분제로

고민을 많이 해왔다는 지인 등의 진

술에 따라 자신의 신변을 비관, 스스

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7·9급 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교행직/ 농업직/ 기술직/ 소방직/ 교정직

호남최대 7·9급 공무원시험전문학원 – 개강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234-0234 직영 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교사가 운동부 여고생 성추행

전남교육청, 정직 처분

전남도교육청은 13일 “여고생 운동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순천 모교체육교사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5월 26일께 학교 운동부 숙소에서 B양의 허리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사의 성추행 사실은 B양이 숙소 밖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한 학교 관계자에 의해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감사 결과 A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조치했다.

B양은 사건 이후 학교 층에 전학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기자 lucky@kwangju.co.kr



여고생 성추행 50대 검거

광주동부경찰

광주동부경찰은 자신이 관리하는 벌리에 세들어 사는 여고생을 성추행한 최모(59)씨와 이를 도와준 임모(59)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12일 밤 11시께 광주시 동구 금동 모빌

라 관리실에서 “돈을 빌려달라”며 찾아온 A(16)양을 들어오게 해 강제로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최씨가 A양을 성추행하는 동안 관리실 문을 닫아준 혐의다.

최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예뻐서 앉으라 했을 뿐”이라고 밝혔으나, 임씨 등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시국선언’ 전교조위원장 벌금 300만원

서울지법, 교사·공무원 등 32명도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정한의 부장판사)는 13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 정현재 전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등 나머지 31명에게는 벌금 70만~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 세력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이고 이는 교원 노조법과 공무원 노조법이 금하는 집단적 정치활동”이라고 밝혔다.

또 “교원 노조나 공무원노조의 활동 범위는 임금이나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교원과 공무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것이고 시국선언의 내용은 이를 벗어났기 때문에 일상적 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설

명했다.

이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 사회에 필수적인 적법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라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고 교육계 등에 미친 파장도 커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 등은 지난해 집단행동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교사·공무원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각급 법원의 1심 재판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에게 유·무죄가 엇갈리는 판결을 내렸으며 먼저 선고한 다른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이날 현재까지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전교조는 논평에서 “공권력 남용 중단, 헌법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배려, 대문화 의회 해소, 경쟁 만들고 교육 중단 등의 시국선언 내용 중 어떤 것이 잘못됐는가”라고 반문한 뒤 “비록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시국선언은 민주주의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영광서 예인선 좌초

기름 10ℓ 유출

13일 오전 9시30분께 영광군 흥능읍 영광원전 인근 돌섬 앞바다에서 부산 선적 36t급 예인선이 좌초됐다.

이 사고로 기관실에 저장된 폐유 10ℓ가 유출됐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등에 의해 제거됐다. 예인선은 현재 90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며, 조만간 인양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사고 당시 예인선은 태풍 곤파의 영향으로 파손된 원전 해파리 유입 방지막을 벗어나면서 원전 해파리 유입 방지막을 벗어나 수중 암초에 걸려 좌초된 것이 아닌가 보고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경은 예인선이 셀룰로 드러난 수중 암초에 걸려 좌초된 것이 아닌가 보고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부취재본부=조익상기자 ischo@

서울서 차 흠처 광주서 처분하려다 멀미

○…서울에서 승용차를 훔친 뒤 경찰의 검문검색을 피해 광주로 몰고 와 처분하려던 대 절도범이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강모(27)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서울시 구로구 모 원룸 조모(43)씨의 집 화장실 창문을 뜯고 침입, 집안에 있던 차 열쇠를 들고나와 원룸 근처에 주차된 조씨의 그랜저 차량을 훔친 혐의.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인터넷을 통해 ‘광주에서 차량을 매입한다’는 연락을 받고 12일 새벽 국도를 이용해 광주까지 왔는데, 경찰은 3시간 여에 걸쳐 차량번호를 조회한 끝에 차량 안에 있던 강씨를 검거.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